



[편의점 시대]
카페 못잖은 분위기
편의점의 진화
나홀로 성장 중
02



코스피	2242.17	(-1.42)	↑	코스닥	692.59	(+3.68)
금리	1.32	(국고체 3년)	↓	환율	1183.90	(원·달러) (+0.90) (17일)

‘코로나19’로 中 거래 자료수집·현지실사 올스톱

상장사 “재무제표 비상… 주총 연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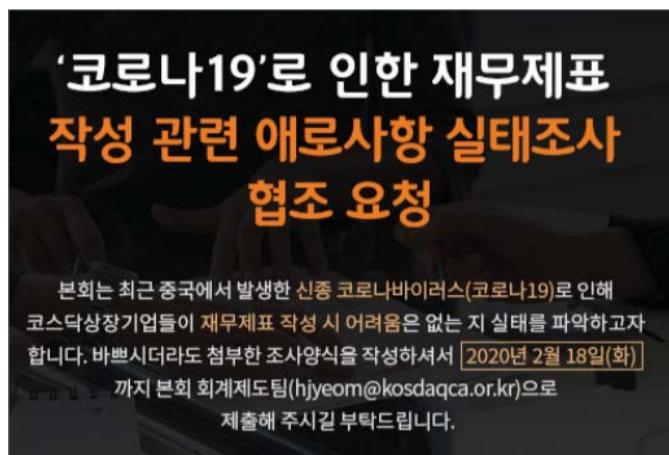
코스닥협회, 업계 현황파악 나서
재무제표작성 애로사항 실태조사

한공회-당국 소통하며 예의주시
감사인 의견 취합 후 대책 논의

‘코로나19’ 사태로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와 회계법인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이 자료 취합은 물론 현지 실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업계는 현황 파악에 나섰고, 상장사들은 주총을 최대한 미루며 재무제표 작성 시간을 벌고 있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소 회계법인이 중국 현지 사정으로 인해 기업 감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총 39개 등록 감사인(회계법인)에 공문을 보내 현황파악에 나섰다.

감사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코스닥 기업들도 비상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협회는 상장사에 공문을



코스닥협회 홈페이지 안내문과 코스닥 상장사 3월 주주총회 일정(17일까지 주총 계획을 밝힌 코스닥 상장사 기준).

/코스닥협회

보내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한공회는 이번주까지 금융당국과 소통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기업 회계 감사 혹은 주총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영균 한공회 상근연구부회장은 “일부 회계법인이 우려를 표한 것은 사

실이지만 아직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오는 21일까지 감사인의 의견을 취합한 다음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역시 “일단 빅4 회계법인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 중소 회계법인이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다면 주총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상법상 12월 결산법인은 90일 이내 주총을 열고 사업보고서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총 연기를 위해선 거래소의 승인과 상법의 재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무제표를 의결하지 못하면 그만큼 법인세 신고도 늦어질 수 있어 세법 문제와도 얹히게 된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김수지 기자 sjkim2935@

KCGI
“위기 해법 공개토론”
조원태 회장에 제안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수 일기를 압박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KCGI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그룹 경영진으로부터 그룹에 당면한 경영 위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주주 연합의 제안에 대한 그룹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동료주주, 임직원, 고객들의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월 중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가능한 일시를 2월 20일까지 답변해주기를 바라며 공개 토론이 성사되면 KCGI 측에서 강성부 대표와 신민석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계열사들과 한진칼 주식 공동 보유계약을 맺고 ‘주주 연합’(3자 연합)을 구축해 한진의 경영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엔 한진칼에 이사 후보 8명 추천, 주주총회 전자 투표 도입, 이사 선임 시 개별투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기재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 업무보고 전 발언하고 있다.

“항공·해운·관광·외식 4200억+ α 자금 투입”

정부 ‘코로나19’ 사태 피해 최소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저비용 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범위 안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밀접성이 크게 확대됐고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 정도도 커졌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글로벌 벤류체인(GVC)의 연결고리는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며 인천공항 슬롯도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주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슬롯을 8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수권 등을 회수하고 있어 수요가 줄어도 운항이 불가피하다. 올해 만큼은 이 회수 조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사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중국 수리조선소 문제로 선박 수리가 지연된다면 선박검사 유료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4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연합뉴스

“불황 장기화 땐 민생 큰 타격… 경제활력에 전력”

文대통령 경제부처 업무보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코로나 공포 소비·여가활동 지나치게 위축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 부처가 함께한 업무보고에서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법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져 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보고에 참석한 경제부처를 향해 “지난해 경제 부처의 활동 중 가장 뚝趺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혁신성장, 혼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 디지털 경제, 혁신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잘 실천돼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경제 부처 대응을 두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시킨 좋은 사례가 됐다. 대·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범부처적인 협업의 경험은 앞으로도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최영훈 기자